

식품·첨단산업 기업, 지방 향한다

3918억 투자·429개 일자리 창출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
10개 기업에 816억 보조금 지원
6개 지자체에 공장 신·증설 추진
올해 누적 투자 유치금액 9530억

정부가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방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총 3918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429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 K-푸드 수출 호조에 힘입은 식품기업과 바이오·반도체 소재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이끌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제3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가 신청한 11개 기업 중 10개 기업에 총 816억원(국비 56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에 선정된 10개사는 모두 강원, 전북, 전남·광주, 경북, 경남, 제주 등 수도권과 거리 격차가 큰 6개 지자체에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기업들이다.

업종별로는 K-푸드 인기 상승에 힘입은 식품산업과 첨단 미래산업이 투자를 주도했다. 식품 3개사(전남광주 광양, 전북 익산, 경남 양산)는 총 1883억원을 투자해 이번 회차 전체 신규 일자리의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개사, 억원, 명)

구분	의약품·바이오	식품	화학·소재	기타	계
지원기업수	2	3	1	4	10
투자규모	963.0	1,882.8	105.2	967.3	3,918.3
신규고용	80	241	20	88	429

/산업부

56.2%에 달하는 241명을 채용한다.

바이오·의약품 2개사(강원 강릉, 제주)도 963억원을 투자해 8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경북 성주의 반도체용 소재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지방의 첨단산업 기반 확충에 힘을 보탤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 지역이 3개사 1333억 6000만원(176명 고용)으로 가장 큰 투자 규모를 기록했으며, 경남 2개사 979억원(80명), 강원 1개사 741억 1000만원(60명), 전북 2개사 537억 6000만원(73명), 제주 1개사 221억 8000만원(20명), 경북 1개사 105억 2000만원(20명)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한 투자 규모는 1차 2567억원, 2차 3045억원, 이번 3차 3918억원으로 회차를 거듭하며 증가 추세다. 보조금 제도 개편과 ‘5극 3역’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이 본격화된 결과로, 올해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9530억원

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관리까지 강화해 기업들의 지방 정착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지역이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이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이행하고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보조금 심의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며, 지방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은 해당 지방정부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한수원 ESG 위원회 역할에 경영혁신 기능 강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기존 ESG 위원회의 역할에 경영혁신 기능을 강화한 제3기 한수원 ESG·경영혁신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직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한수원은 지난 18일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김희천 사장과 비상임이사,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 ESG·경영혁신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기 위원회는 ‘최고의 안전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더 퍼스트 무버(The First Mover) 한수원’이라는 경영방침에 발맞춰 기존 자문 기구의 역할을 경영혁신 분야까지 확대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급변하는 에너지 및 경영 환경 속에서 외부 전문가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을 경영 전반에 이식해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새 위원회는 유연백 한수원 비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두고 에너지, 사회, 거버넌스, 경영혁신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대내외 주요 경영 현안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조직·사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한수원이 추진해 온 ESG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김희천 한수원 사장은 “ESG 경영과 경영혁신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경영 과제”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의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 1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대청댐 수열에너지 활용 친환경 AIDC 조성 박차

수자원공사, 약 2만RT 규모 수열로
AIDC 냉각 도모… 7개 기관 ‘맞손’
투자선도지구 선정, 약 3525억 투입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 및 민간 IT 기업들과 손잡고 대청댐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8일 충북도청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전력공사, 충북테크노파크, ㈜GS ITM, ㈜임팩스와 대청댐 수열특화단지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전력계통 연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주시 서원구 일원에 조성되는 대청댐 수열특화단지 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에 약 2만RT(냉동톤) 규모의 청정 수열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전력망과 실질적인 민간 기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데이터센터는 전체 소비 전력의 40% 이상이 장비의 열을 식히는 냉방용으로

쓰여 전력 부담이 매우 큰 시설이다. 하지만 수열 냉각 방식을 도입하면 기존 에어컨 가동 방식 대비 냉방 에너지를 30% 이상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고성능 연산으로 막대한 열을 발생하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과부하를 줄여 입주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낮추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협약에 참여한 7개 기관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수열·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 ▲안전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 및 설비 구축 ▲인·허가 행정 지원 ▲지역 AI 생태계 조성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가동한다.

총사업비 약 3525억원이 투입되는 대청댐 수열특화단지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인·허가 신속 처리, 국비 지원, 세제 감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국순당서 현장 벤치마킹

노사 파트너십 우수기업 현장 행보

노사발전재단이 ‘문제해결형 노사 협력’의 일터 정착을 위한 현장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사 간 대립구도 일변도의 관행 타파에 목적을 둔다.

재단은 지난 17~18 이틀간 노사 파트너십 활동 우수기업인 국순당을 찾아 현장 벤치마킹 워크숍을 가졌다. ‘2026년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벤치마킹 대상인 국순당은 2021년 노사파트너십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원·하청 상생협력 활동을 모범적으로 펼치고 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국순당의 원·하청 상생 모델, 협력적 소통 노하우, 근로조건 개선 사례 등을 살펴봤다.

워크숍에서는 단혀 있던 대화의 문을 여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뤘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상생 사례 학습을 시작으로 참여 활동을 통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사후 처방이 아닌 자사 실정에 맞는 ‘사전 예방적 파트너십’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



노사발전재단이 민간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노사 파트너십 활동’ 우수기업인 국순당을 찾아 현장 벤치마킹 워크숍을 실시했다.

았다.

올해 3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 ‘2026년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의 핵심은 ‘사전 예방’과 현장 밀착형 소통’이다.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노사가 대화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현장지원 코칭’을 전면 도입했다.

재정 지원은 목표 100개소를 이미 달성했다. 현장지원코칭 역시 97개소를 지원해 목표 100개소 달성을 앞두고 있다. 개별 사업장을 넘어 업종·지역별 협의회까지 참여 폭이 넓어졌다. 이에, 노동환경 실태 파악 및 노사 공동의 대응 등 산업 전반에 상생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美·日 등 해외 소고기 등급제 ‘한눈에’

축평원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 발간

외국에서 통용되는 소고기 등급제를 비롯해 등급판정 자동화 기술 추이 등을 엿볼 수 있는 책자가 나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 축산물 등급제 및 기술 발전 지원을 위해 ‘2026년 해외 축산 정보 : 해외 주요국의 쇠고기 등급제 및 소도체(식용으로 가공 전 형태) 등급판정 자동화 기술 동향’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호주,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별 축산업 구조를 비롯해 유통 환경, 주요 소비 특성 및 수출시장에서의 위상 등이 담겼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축산물 등급제 운영 목적과 평가 기준,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소고기 등급제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품질과

‘수율’(소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나 비율을 함께 평가하고, 호주는 도체 특성과 소비자 ‘식품 품질’(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느끼는 맛과 품질)을 연계한다.

일본과 한국은 마블링 중심으로 육질을 세분화하는 반면,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 거래 표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각국의 소고기 등급제가 고기 외형이나 상업적 가치 평가에서 나아가,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품질 중심 평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주의 MSA(식품품질 등급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도체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의 식품 품질을 예측하는 체계다.

미국에서도 등급판정 결과와 소비자가 체감하는 품질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등급표준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부산항만공사, 통영시에 바다숲 조성

총 7개 기관 민·관 협의체 구성

부산항만공사가 기후위기 대응 및 해양생태계 보전 목적의 바다숲을 조성한다. 이는 경남 통영시 육지면 동동 인근 해역에 1.55km2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흡수원 확대와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경남 거점 금융기관인 BNK금융그룹, 부산항터미널 운영사인 신선대감터미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HPNT, 부산컨테이너터미널,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등 총 7개 기관으로 꾸려졌다.

바다숲은 바다사막화로 훼손된 연안에 해조류가 군락을 이루도록 조성해, 해양

생물의 산란·서식공간을 회복해 연안생태계의 종다양성과 해조류 생태량을 증가시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해조류를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연기반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바다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및 기관 간 협력 ▲대상 해역 내 해조류 등 서식기반 조성 ▲조성해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효과 모니터링 등이다.

이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부산항 부두 운영사가 함께 참여해 해양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태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ESG 연대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공사는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